## ‘세종시 수정안’ 부결…광주·전남 영향은

# 투자유치 ‘우려가 기대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무안기업도시, 지역 국가산단 및 일반 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세종시가 기업과 투자의 블랙홀이 돼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수정안 부결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비롯 지역 산업단지에 대체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 광주시·전남도 대체 투자 유치 총력전

## 나주혁신도시 등 택지 땅값 상승 조짐

이에 따라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산업’이 세종시 발전방안에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법안 부결로 당초 계획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세종시 발전방안에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전체 부지(731만5148㎡)의 4.9%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36만178㎡)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러스터 용지가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세종시 기업 유치가 불투명해지면 오히려 기업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등 ‘반사 이익’을 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측도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뒤 혁신도시 내 이주자 택지 분양가가 폭락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뚝 그쳤지만 수정안 부결 조짐이 나오면서 땅값도 다소 오르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무안 기업도시와 전남도내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도 ‘악재’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세종시에 대규모 첨단연구·개발기관이 들어서기로 예정됐던데다,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역 산단의 경쟁력이 훨씬 불리했던 만큼 수정안 부결이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세종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대기업 가운데 전남의 성장 동력과 맞는 기업들을 물색, 다양한 지원 방안과 지리적 장점 등을 홍보하는 등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이하 R&D특구) 조성사업과 LED단지 조성사업에 세종시에 투자키로 했던 기업·대학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주는 R&D 특구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들어설 세종국제과학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일부를 끌어들여 연구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밑그림도 구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말 고시예정인 광주 R&D특구에 대한 특구육성종합개발관리계획에 이들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산업연구원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국비지원을 R&D 분야에만 한정하고 연구인프라 확충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R&D특구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었다”며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 갈 예정이었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구(7712만㎡)에 비해 2589만㎡가 작은 광주의 R&D특구의 면적(5123만㎡)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관련법’이 부결되면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내 원형지인 골프장 부지 공급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번 법안 부결로 골프장의 민간 부문 매각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향후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미르코 츠벳코비치 세르비아총리와 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회 표결 전 반대토론자로 나서 원안 지지 의사를 밝힌 후 의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 대기업들 세종시 투자계획 백지화

### 삼성·한화·롯데 등 5곳 대안 마련 착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 한화, 롯데, 웅진 그룹은 즉각 투자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세종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대체 부지를 물색 키로 하는 등 ‘세종시 출구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넣어 마련한 수정안에 따라 세종시에는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제품업체인 SSF 등 5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했었다.

이들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등의 분야에서 총 4조5150억원을 세종시에 투자해 2만2994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이 계획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삼성그룹은 세종시 대신 기존 계열사 공장의 여유부지나 대체부지를 찾아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은 애초 2015년까지 삼성전자, 삼성LED,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5개 계열사가 세종시 일원에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신사업과 관련한 분야에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도 “이제 정부와의 투자 양해각서(MOU)는 효력은 자동 소멸됐다”면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국방미래기술연구소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화는 항공·우주 분야의 자체 연구센터가 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연내에 착공하게 해 달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었다.

한화는 이에 따라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기존 관련 연구소 시설을 확충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좋은 조건이 나오면 검토를 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화는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한화L&C, 대한생명 등 4개 계열사가 60만㎡(18만평) 규모의 부지에 10년간 국방기술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 등에 1조3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었다.

롯데그룹도 확보된 부지나 기업 인센티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한 입지 시너지 효과가 사라진 만큼 식품과학연구소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웅진 관계자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인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세종시 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 세종시 논란 일지

▲2002년 9월 30일=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2003년 12월 29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년 4월 17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

▲ 〃 10월 21일=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위헌 결정

▲2005년 3월 2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11월24일= 법재판소, 행정도시건설법 헌법소원 각하

▲2006년 7월31일=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 확정

▲2006년 12월21일=행정도시 명칭 ‘세종시’ 확정

▲2007년 7월 20일=행정도시 기공식

▲2009년 9월 3일=정운찬 총리 후보자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2009년 10월23일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세종시 수정론에 쐐기. ‘원안 플러스 알파(+α)안’ 제시.

▲2009년 11월27일=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지 표명 및 공식 사과

▲2010년 1월11일=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0년 3월23일=정부,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 국회 제출

▲2010년 6월2일=한나라당 6.2지방선거 패배

▲2010년 6월14일=이 대통령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

▲2010년 6월22일=국회 국토해양위, 표결로 수정안 부결

▲2010년 6월29일=국회 본회의, 표결로 수정안 부결

## 이대통령 “유감스럽지만 국회 결정 존중”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새벽(현지시각) 국회 본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 직후 “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전남 운명 바꿀 기틀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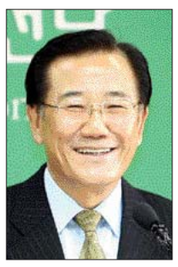
### 박준영 전남지사 민선 4기 결산 회견

박준영 전남지사는 29일 “민선 4기는 패배주의를 탈피하고 전남이 자신감을 갖는 시기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4기 도정 주요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선 4기를 “어떻게 지역의 운명을 바꿔 볼 것인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한 시기”로 규정하고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도민들에게 여러가지 약속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박 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기업을 유치,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04년, 2006년에도 약속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시만 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이라 약속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룬 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민선 5기를 펼쳐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선 4기 도정의 성과로 ▲친환경 생명산업 ▲일자리 6만3000개 창출 ▲2대 국제행사 유치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 ▲J프로젝트와 혁신도시개발 ▲해상경제권 중심지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행복마을 조성 등을 꼽았다.

반면, 농촌 정책과 금융위기로 인한 호텔·리조트 유치 등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지사는 “농촌을 바꿔보고 싶은 꿈이 있지만 욕심만큼 하지 못했고 해양관광레저개발계획도 규제에 묶여 늦어졌다”면서 “여수박람회와 연계한 숙박시설 유치도 금융위기로 인해 상당부분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PF는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